

## IEA 온난화 대비 현실적 목표 모색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오는 12월 유엔회담에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공해배출을 줄이기 위한 공정하고도 현실적인 목표수립을 모색키로 지난 5월 25일 합의했다.

IEA 에너지 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세계 에너지 소비증가와 새로운 공해 억제목표 설정 등 환경정책간 조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성명은 IEA가 당면한 도전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적이고 성취가능하며 비용효율적인 에너지 정책의 수립과 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장관들은 또 현재는 물론 장래의 환경정책 수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중국, 인도, 러시아 등과의 접촉을 확대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위협에 공동대처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IEA 경제전문가들은 향후 10년간 아시아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이 지역의 에너지 수요도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온난화를 부추기는 이산화탄소의 증가를 의미한다.

IEA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소비는 오는 2010년까지 매년 2.2%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아시아의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지역의 에너지소비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의 수요급증으로 연평균 5%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선진국 집단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4%를 넘지 않을 전망이다.

에너지 장관들은 또 점증하는 수입의존도로 에너지 안보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고 말하고 석유 수출국기구(OPEC)와 지속적인 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 사상 최고

지난해 오존층 파괴물질인 CFC(염화불화탄소)의 생산량은 계속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미국 환경문제연구기관인 월드 워치 인스티튜트(WWI)가 지난 5월 24일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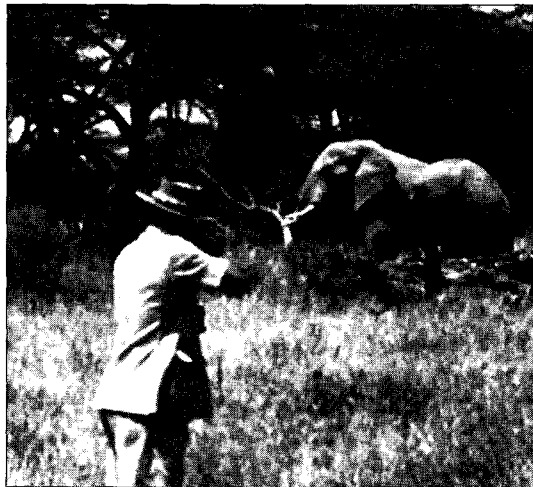
WWI는 이날 연례보고서를 통해 냉장고와 에어컨 등에 사용되는 CFC의 작년 전세계 생산량이 지난 88년에 수립됐던 종전 기록보다 77%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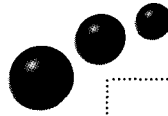
그러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6년에 62억5천만t으로 증가, 이제까지 최고 기록이었던 지난 95년보다 3%가 늘었다.

WWI는 96년말 현재 전세계 식량비축량이 55일 지속분에 불과,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집계했다.

세계 식량비축량은 지난 87년에 최고 1백4일분까지 올라갔으나 인구증가 둔화와 식량생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비축량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고 WWI는 미농무부 통계를 인용, 발표했다.

풍력발전 생산량은 95년보다 26% 늘어난 6천 70MW에 달한 반면 원자력발전 증가율은 1%에도 미





치지 못했다.

태양열발전은 배터리 가격 인하에 힘입어 개발도상국에서만 40만가구 이상이 태양열 발전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 공동작성자인 크리스 프래빈 박사는 “풍력과 태양열은 2000년대 초반이면 기존 에너지원과 함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 5-10년뒤면 누구라도 풍력과 태양열을 미미한 에너지원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유엔개발계획(UNDP)과 민간 재단들의 재정적 지원으로 지난 92년이래 매년 발간되고 있다.

### 일환경청 온난화방지 입법 촉구

일본정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효과를 가져오는 가스(온실가스)의 배출을 규제, 환경세를 도입하는 등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일본 환경청이 지난 6월 3일 연례 보고서에서 촉구했다.

환경청은 이날 보고서에서 또 통산성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 에너지 정책을 문제삼고 자동차 연료 효율 기준을 강화하고 쓰레기를 연료로 하는 발전기 사용을 늘리는 법안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청은 에너지의 안정공급 확보라는 현재의 정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축소에 우위를 두는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에서 95회계연도(95년3월-96년3월)중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는 전회계연도에 비해 8.3% 증가했다.

이로 인해 일본이 오는 2000년까지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90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유엔 기후변화 협정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을지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청은 이와 함께 되도록 에어컨이나 개인 승용

차 이용을 자제, 에너지 소비를 줄여 생활방식을 보다 환경 친화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일본은 오는 12월 교토(京都)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정 서명국 제3차 회의를 개최하고 2000년 이후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 등에 관한 의정서를 채택한다.

지난 92년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 유엔 지구 정상회의(리우 환경회의)에서 채택된 이 협정은 온실 가스에 의한 지구 온난화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 코뿔소 등 멸종위기종보호 논의

야생 동식물에 관한 국제회의가 지난 6월 10일로 개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자연보호주의자들이 멸종 위기를 맞고 있는 코뿔소 보호를 위한 기금 증액을 호소하고 나섰다.

세계동물보호동맹 코뿔소 전문가인 에스몬드 브래들리 마틴은 이날 하라레에서 열린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제10차 총회를 맞아 기자회견을 갖고 “가장 크고도 유일한 문제는 돈”이라고 말했다.

미얀마와 베트남을 제외한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 70년 7만마리에서 현재 1만2천-1만5천여 마리로 줄어든 야생 코뿔소 보호를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지만 기금 부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연보호주의자들과 동물 권리 보호 기구들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코뿔소 보호와 양육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물자의 부족 현상을 겪고 있으나 서방 기부자들은 전혀 도와주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세계자연야생생물기금의 홀리 더블린은 “코뿔소 팔에 대한 수요가 계속된다면 코뿔소 보호를 위한 현장 소요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지만 거액 기부자들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부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코뿔소 뿔은 극동지역에서는 주로 고열 치료제로, 중동지역에서는 전통 단검의 손잡이용으로 남획되고 있는데 코뿔소 보호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1km<sup>2</sup>당 1천달러 정도에 달한다.

한편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CITES 회의 이틀째를 맞아 일본은 밍크 고래의 국제 거래를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환경보호론자들은 흰 코뿔소 교역 재개를 희망하는 남아프리카와 함께 이를 공박했다.

#### 동물의 약재사용 사상 첫 공식논의

멸종위기 동식물 국제거래 협약(CITES)은 짐바브웨의 수도 하라레에서 개최중인 회의에서 전통 의약계가 동물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을 사상 처음으로 독립안건으로 다루고 있다고 동물보호운동가들이 지난 6월 11일 밝혔다.

동양 전통의약계가 코뿔소 뿔, 곰 쓸개, 호랑이 뼈와 같은 야생동물 신체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으나 CITES가 이에 대해 새로운 접근방식을 시도하고 있다고 국제야생동식물거래조사위(TRAFFIC International)의 주디 밀스 동아시아 위원장이 말했다.

TRAFFIC은 세계적 자연보존기구인 국제자연보존연맹(ICUN)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조직으로 총 1백39개 회원국이 파견한 1천5백명의 대표단 및 옵서버들과 함께 2년마다 한번씩 열리는 CITES의 이번 제 10차 회의에 참석했다.

밀스 국장은 "전통 의학계는 야생 동식물 보존 노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해야하며 CITES 역시 전통의약이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의 독립 분야로 취급하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경청, 양보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세계의 전통 의약계는 동서양 할 것 없이 동식물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유독 동아시아 전통의약계만 동식물의 약재 사용으로 비난받아왔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방 세계와 그 언론이 동아시아 의약계가 코뿔소의 뿔을 최음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는 목숨이 위태로운 고열을 치료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밀스 국장은 그러나 "전통의약을 존중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현재 잔존한 코뿔소나 곰, 호랑이 등을 10억 중국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중국이 최근 약전 목록에서 코뿔소 뿔을 삭제하는 대신 물소 뿔을 기재했으며 류머티즘과 관절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호랑이 뼈의 대체품도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 세계은행 범세계 환경주식거래 제의

세계은행은 이달말께 뉴욕에서 열릴 예정인 유엔총회 생태학 특별회의에 제출할 10개항의 환경보호권고안을 지난 6월 12일 공개했다.

'그린 10'이라고 불리는 세계은행의 환경보호권고안은 앞으로 5년안으로 전세계에서 휘발유의 납성분 첨가물을 제거할 것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다.

현재 미국, 브라질 등 18개국에서는 납성분 첨가물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또 이 권고안은 특히 오존층 파괴와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전지구적 '환경주식 거래제도'를 설립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이 제도는 한 기업이 이산화탄소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다른 나라의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방법으로 오염 배출과 환경개선을 상호 교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권고안은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와 맑은 물 공급 대책, 육상과 바다의 주요 생태계 보전 대책, 국제환경기금 조성 방안, 환경운동에 대한 시장 유인 제공, 사회 경제개발에 있어 자연보존 측면의 강조와 환경파괴의 경제적 손실 측정 시스템 강화, 자연 자원의 소비를 가속시키는 방향으로 환경에 피해를 주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관행 철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미캘리포니아주소수민족 지역 대기오염도 높아

미캘리포니아주소수민족 거주지역 주민들은 백인 거주지역 주민들보다 거의 3배나 높은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는 보고서가 지난 6월 12일 공개됐다.

워싱턴에 본부를 둔 환경활동그룹(EWG)은 캘리포니아 전역 1백 61개 지역의 대기오염도를 측정, 분석한 보고서를 통해 소수민족 거주지 주민 54%가 환경보호국(EPA)이 제시한 기준치보다 더 높은 오염된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백인 거주지역 주민의 경우 19%만이 EPA 기준치보다 높은 대기오염에 노출돼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EWG는 이 보고서가 "인종별 거주지간 오염도의 불균형을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라면서 소수민족 거주 주민들은 대기오염을 EPA 기준치 이하로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북경 천연가스 동력 버스-택시 도입

중국은 북경의 심각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하나로 북경시에 천연가스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버스와 택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 데일리가 발행하는 주말 경제지 '비즈니스 위클리'가 지난 6월 15일 보도했다.

위클리리는 국영회사인 중국석유천연기총공사(CNPC) 당국자의 말을 인용, CNPC가 중앙정부와

북경시 당국의 협조 아래 올해 3개 천연가스 주입소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클리리는 계획의 시행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채 "수백대의 차량에 천연가스 탱크와 엔진이 장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CNPC 당국자는 CNPC가 연간 1백70억m<sup>3</sup>의 가스를 생산함에 따라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시킬 수 있어 차량소유자나 가스 주입소가 모두 천연가스 차량 도입계획에 부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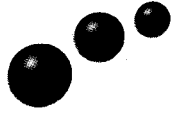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이미 사천성, 하얼빈시, 심천시등에 4천30대의 무공해 천연가스 차량을 도입했다.

한편 위클리리는 북경시가 전국적 실시를 목적으로 마련된 에너지 운송정책의 시험도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북경은 공해방지 정책의 일환으로 지난 6월 1일 중





국에서 최초로 유연휘발유의 판매를 금지시켰다.

현재 북경의 도심 8개 지역에 실시되고 있는 이 조치는 내년초 시 전역으로 확대되고 수년내 전국적으로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 북극권 생태계 오염원 유입 저지 선언

북극권에 영토를 가진 8개 국가 환경장관들은 지난 6월 13일 취약한 북극 생태계를 오염원 유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미국, 캐나다, 러시아와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5개 북유럽국가 환경장관들은 이날 노르웨이 알타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며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지역은 주로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북극회의’를 결성한 8개국 환경장관들은 이어 이 문제를 경감시키기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했다.

8개국이 지난 91년 북극환경보호전략계획을 출범시킨 후 4번째로 열린 이번 환경장관 회의는 이를 위해 보호전략계획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의 권고들을 준수하기로 다짐했다.

성명은 또한 북극권내 석유탐사에 특별환경지침을 도입하고 핵과 관련한 모든 행동에 안전조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 미재계 온실가스 감축 협정 적극 반대

유엔 ‘지구 정상회의’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클린턴 행정부는 경제계의 로비에 밀려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등의 배기가스 감축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을 여전히 기피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의 거센 압력에 직면한 미행정부는 오는 지난 6월 12일 일본에서 개최되는 ‘온실효과 가스’

감축협정 체결을 위한 회의를 앞두고 열린 예비회의에서도 유동적인 협상자세를 취하고 있다.

배기가스 감축은 결국 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하는 미국 기업들은 12월 교토(京都)회의를 앞두고 막대한 자금을 들여 협정체결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

엑슨, GM, GE 등 1백30여개 주요기업 최고경영자들은 지난 9일자 월 스트리트 저널지에 기본요율이 39만4천달러나 하는 광고료를 들여 “이산화탄소 감축협정은 금세기 뿐 아니라 21세기에도 가장 중요한 경제적 결정이 될 것”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3면에 걸쳐 게재했다.

이들은 탄산가스 감축협정 체결로 인한 환경적 이익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다 많은 토론이 있어야 한다고 클린턴 행정부가 서둘러 정책결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